

포항시,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육성

환경부·경북도와 업무협약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박차 클러스터 완공 이후 활성화 강화

포항시가 환경부·경북도와 손잡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7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포항시와 환경부, 경북도는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국가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최근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7일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배터리순환이용 기업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업무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에코프로, 에너지머티리얼즈, 피엠그로우 등 배터리 재활용 지역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완섭 장관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과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오는 6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준공 예정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현장 방문해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완공 이후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및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연구 지원단지와 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계획수립과 기술개발 지원,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자원순환 체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사용후배터리순환이용 산업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환경부, 경북도와 함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 적극 협력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강덕 시장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배터리 순환이용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의 현황을 설명하고 녹색산업 성장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지난 2009년 폐지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의 재설치 등을 건의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신안군

'빈집 리모델링' 7000만원 지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빈집의 경관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주택을 설치한 뒤 5년~7년간 신안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신안군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확보 공사비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동식주택의 경우 구매 및 설치비를 동일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부산시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 본격화

부산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하며 실효성 있는 '부산형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형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구·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다.

사업은 구·군과 일자리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연계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경주시는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양산시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매출 11억

양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문을 연 양산시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이 9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1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매출액 중 10억원이 농가에게 직접 환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회원 수도 3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수수료 10%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광주시, 3대 문화시설 유치 박차

문체부 '문화한국 2035 프로젝트'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유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설립하기 위한 '문화한국 2035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3대 문화시설 유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예산 확보와 미술자료, 민주역사자료 수집 지원 등 해당 기관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지난 2023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와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역특화형 미술관 건립 비전을 담은 구상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사관 설립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민주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민주화사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검토 등 문체부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사관이 광주에 들어서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관광개발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조직위원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서울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서울시, '여수세계섬박람회' 맞손

섬 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등 협력

전라남도,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 관광 활성화, 주요 행사 사전 공동 마케팅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식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썬)YC-TEC 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관계자 등 60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협약식에 이어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비전과 대한민국의 섬 정책에서의 전남의 역할, 미래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섬의 가치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아라뱃길을 따라 서울과 여수를 잇는 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전남도에서 올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섬과 섬을 잇는 '섬섬곡곡 연안크루즈 시범 운영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강에서 출발해 여수로 이어지는 특별한 크루즈 노선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흥행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결혼·육아에 부담주는 관행 타파

'4대 문화 운동' 전개

경북도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를 위한 '4대 문화 운동'을 펼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4대 문화 운동은 ▲부담 없는 결혼(적은 비용으로 결혼하고 크게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행복한 출산(비혼 출산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가족관계 인정 문화) ▲즐거움 육아(아이들을 최우선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모두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으로 돼 있다.

경북도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민간 주도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협업해 확산시키고 카드 뉴스 콘텐츠 제작 배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 팝업 이벤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각종 행사나 회의 등에서 문화 운동을 알리고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 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 환경 개선, 작은 결혼식 혼수비용 지원, '웰컴키즈존' 및 일자리 편의점 확대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대구시, 공무원 채용 경쟁률 올라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영향

거주지 제한 요건이 폐지된 대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5명을 선발하는 보건연구직 등 경력경쟁채용 3개 직렬에 모두 38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25.7대 1

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결과 지역 외 응시자는 266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69.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인 35.4%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거주지 요건 폐지로 인해 대구시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전국 의 응시생들이 활발히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